

민선 4기 과제와 전망

3 참여자치시대 열자

주민이 깨어나야 지방이 살아난다

지방자치제가 10년을 맞았지만 주민참여의 결여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각종 위원회와 반사회, 공청회 등 여러 형태의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기 보다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나 집행의 효율성 확보,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지방정부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지방정부의 문제해결능력 증대,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 집행부는 물론 광역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지역 시책 인지도 낮아 '그들만의 자치' 가능성 주민소환제 등 확대 실시 지방권력 독점 막아야

인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의 견제와 참여는 절실하다.

광주시가 지난 해 12월 4천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61%가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시청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2%에 불과했다. 또 주요 시책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는 18%, '관심있는 부분만 알고 있다'는 19%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지역 주민들의 지역시책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지금 같은 주민들의 자치역량과 참여라던 자치 민선 4기도 정치인과 공직자, '그들만의 자치'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

해다. 지난 달 2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주민소환제'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참여예산제' 등의 확대 실시를 통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있는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유권자가 바꿀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지방권력 독점 상황에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물의를 빚을 경우 해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로 ▲

시·도지사의 경우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 20%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하게 되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시행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방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참여예산제'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은 주민 참여를 통해 지난 2004년 예산사업에 총 25건, 비예산 사업에 총 29건의 주민 의견을 반영시켰으며 2건의 과다 예산을 주민들이 조정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조선대 오수열 정치학부 교수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를 지방의회에만 맡길 수는 없는 현실이다"면서 "주민 개개인의 지방정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시민사회, 지방언론 등을 통한 참여 자치만이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문가 제언



김한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방식의 주민 참여가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시민들의 조례제정운동으로 시작되고 제안돼 국회입법으로 완성된 주민소환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

시민단체에서 제안해 추진되고 있는 '지하철시민서포터즈 메트로엔젤'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문화공공체를 만들고 동시에 승객 늘리기 운동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시민들

창조적 에너지 발산 위한 역동적 시민참여

이와 같은 감시 기능의 주민참여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지방정부와 주민이 같이 고민하는 창조적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2004년에 광주시의회에서 실시했던 '대중교통특별위원회 시민자문위원회'는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승객과 버스기사·경영전문가·회계사·교통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댄 보기 드문 사례다.

역시 창조적인 대안제시로 상생의 지역문화를 만들어 갈 때 지방자치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다.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산한 시민들을 존중해 주며, 함께 어려운 과제를 나눠가야 한다. <(사)광주전남개혁연대 공동대표>

"기득권 버리고 정권 재창출 중심 서겠다"

■한화갑 대표, 광주 기자 간담회

"민주당만으론 수권정당 가는 데 한계"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7일 낮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중심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7일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고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수권정당으로 가는 데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이날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한 대표는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의 민주당으로 수권정당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정권재창출의 중심에 서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세력, 정당, 개인과 힘을 모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수권정당을 이뤄내겠다"면서 "한국정치의 틀을 새로 짜는 중심에 서겠다는 지방선거의 약속을 지키겠

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기득권 포기와의 관련, "대표로서 개인적인 면과 민주당 입장에서 기득권 모두가 포함된"면서 "민주당의 역사성과 계속성, 정체성 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정치적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의 제세력과의 연대는 무엇이 국민과 사·도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냐는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건 전 총리와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한 대표는 "항상 (문을) 열어 놓은 채"라고 말했다. "내년 중반에나 후보를 결정하면 되는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문은 질문에는 "개인의 입장을 밝힐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론을 낚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장 민주당 중앙당 선대본부장, 박광태 광주

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유종필 광주시당 위원장, 최인기 전남도당 위원장, 김동진 광주북갑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국제결혼 이주자' 6,869명

■행자부 국내 거주 외국인 실태 조사

나주 604명 등 22개 시·군 고루 분포...광주는 703명

전국 거주 외국인 53만 6천명...총인구의 1% 넘어서

■광주·전남 외국인 국적별 현황

Table with 2 rows (Gwangju, Jeonnam) and 10 columns (Total, China, Korea, etc.).

북구 75명, 광산구 48명 순이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등을 포함 총 외국인 거주자는 전남이 1만 1천980명, 광주는 6천71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을 위한 기구나 단체는 전무한 실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간헐적인 지원활동을 벌이는 실정에서 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대책 확대가 절실하다.

전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근로자가 47.6%인 25만 5천3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제결혼이주자가 12.2%인 6만5천243명, 국제결혼가정 자녀 4.7%인 2만5천246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상사주재원, 외교관, 유학생 등 기타가 35.6%인 19만824명이었다.

거주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46.1%, 24만 7천4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남아시아 23.0%, 남부아시아 6.3%, 미국 4.8%, 대만·몽골 각 4.0%, 일본 3.6% 등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수도 배관 (냉·온수난방) 시정업체. 엘케이크린(주) 광고. Includes contact info: 062-603-0799.

신우 활기유니트 Airpass. Advertisement for a travel agency with a family photo.